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35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사회안전망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지원사항, 사회복지관련 기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복지
환경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7,

FAX 042-270-5039, E-mail : kjun092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소위원회) ① ~ ③ (생략)	제7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 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 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 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간사는 <u>사회복지담당과장</u>이 되고, 서기는 <u>담당사무관</u>이 된다.</p> <p>③ (생략)</p>	<p><u>경우</u></p> <p>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④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u></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복지정책과장</u> -----<u>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u>-----</p> <p>③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5.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

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